

시 청 자 권익보호 동 향 리 포 트 VOL.05

시청자권익정보센터



01

정책이슈분석

생성형 AI 등 신기술과 시청자 권익 보호

01. 청소년의 생성형 AI 리터러시 증진 방안

— 이창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청소년의 생성형 AI 리터러시 증진 방안¹⁾



이창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생성형 AI의 확산과 리터러시의 필요성

최근 챗 GPT(ChatGPT), 제미니(Gemini), 미드 저니(Midjourney) 등 인공지능 기반의 정보검색과 활용이 활발해지면서 인공지능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흔히 디지털 원주민 세대, 알파 세대로 불리는 현재의 청소년들은 인공지능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대여서 인공지능을 잘 다루고 활용하는 능력이 이 세대에게 매우 중요하다. 즉 AI를 통해 학습하고 대화하는 일이 일상화 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AI에 대한 활용능력이 이들의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김태원, 2023). 청소년들 또한 수행평가나 학습을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청소년들이 생성형 AI가 도움이 된다고 많이 응답한 업무는 필요한 자료 찾기, 자료 요약, 번역, 코딩이었다(이창호외, 2024). 반면 자기소개서 작성, 시나 소설 등 창작, 수학이나 과학 등 문제 풀기 등의 업무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수업이나 과제 때문에 생성형 AI를 사용하게 됐다는 응답도 많았다. 즉 생성형 AI가 확산되면서 이를 접하는 청소년들이 점차 늘고 있으며 활용 빈도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정책이 활발히 실행되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생성형 AI가 초래할 수 있는 허위정보를 판별할 수 있는 리터러시 역량을 강조하고 팩트체크 기관과 협력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툴을 개발하였다(김주희, 2024). 특히 선거 캠페인을 혼탁하게 만드는 허위정보에 대한 비판적 이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유네스코(UNESCO, 2022)는 AI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등교육에 적합한 AI 교과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있다. 유네스코가 제시한 AI 교과과정은 세 범주, 9개 토픽을 가지고 있다. 세 범주는 AI 기초(AI Foundations), 윤리와 사회적 영향, AI 이해, 사용 및 개발이고 각 범주마다 세 가지 토픽이 존재한다. 즉 AI 기초는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데이터 리터러시, 맥락적 문제 해결을 포함하고 있고 윤리와 사회적 영향은 AI 윤리, AI의 사회적 함의, AI의 ICT 분야 외의 적용을 담고 있으며 AI 이해, 사용 및 개발은 AI 기술(머신러닝 등)의 이해와 사용, AI 기술(챗봇 등)의 이해와 사용, AI 기술의 개발을 포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AI 교육 지침인 AI4K12를 통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르는 AI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1)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4년 고유과제 <청소년의 생성형 AI 이용실태 및 리터러시 증진 방안연구>를 바탕으로 함.

<https://ai4k12.org/> 참조). 교육과정에서 배워야 할 AI와 관련된 내용은 인식, 표현과 추론, 학습,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사회적 영향 등 5가지 아이디어에 잘 나타나 있다. 즉 인공지능이 세상을 어떻게 표현하고 데이터를 통해 어떤 학습을 하며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도록 교육과정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

이처럼 AI 교육이 강조되면서 AI 리터러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AI 리터러시는 “AI를 인지하고 AI에 대한 기술적 지식과 윤리적이고 비판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AI 기기나 서비스를 생활과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더 나아가 AI를 설계하거나 창의적인 결과물을 산출하고 AI를 바탕으로 사회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규정된다(황현정, 황용석, 133쪽). 최숙영(2022)은 AI는 무엇인가?, AI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AI는 어떻게 사용돼야 하는가?, AI와 어떻게 효과적으로 일할 것인가? 등 4가지 측면에서 AI 리터러시를 제시한다. 즉 기계가 지능을 갖는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고 머신러닝, 딥러닝 등 AI의 작동원리를 이해하며 AI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해하고, 인간과 AI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를 인식하는 것이 AI 리터러시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 글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요 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소개한 뒤 AI 시대에 청소년의 AI 리터러시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생성형 AI 리터러시 수준 및 교육 경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생성형 AI 정보에 대한 비판적 평가능력, 생성형 AI와의 소통 능력, 생성형 AI의 창의적 활용능력, 생성형 AI의 윤리적 활용능력 등 네 가지 측면에서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로 생성형 AI 리터러시를 측정하였다(이창호 외, 2024).

<표 1>에서도 나타나듯이, 전반적으로 청소년의 리터러시 수준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생성형 AI에게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를 올바르게 책임 있게 사용하는 능력은 높은 편으로 나타난 반면 생성형 AI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비판적 평가능력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생성형 AI와 대화할 때 필요한 전문적인 단어나 용어를 쓸 수 있는 능력이나 생성형 AI의 도움을 얻어 자신만의 독창적인 글이나 이야기를 쓸 수 있는 능력은 비교적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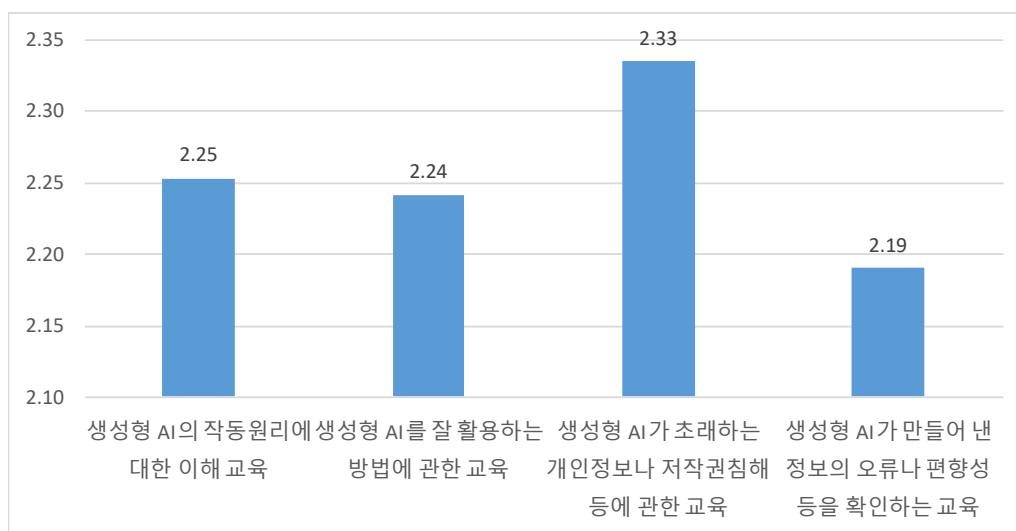
<표 1> 청소년의 생성형 AI 리터러시 역량

척도	문항	평균
비판적 평가능력	나는 생성형 AI가 제공하는 정보가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다.	3.36
	나는 생성형 AI가 제공하는 정보가 믿어도 되는지 판단할 수 있다.	3.54
	나는 생성형 AI가 제공하는 정보가 특정한 견해나 생각에 치우쳐져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3.45

소통능력	나는 생성형 AI에게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어떻게 질문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3.71
	나는 생성형 AI와 대화할 때 필요한 전문적인 단어나 용어를 쓸 수 있다.	3.27
	나는 원하는 정보나 답변을 얻기 위해 생성형 AI와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3.55
창의적 활용능력	나는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새로운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	3.49
	나는 생성형 AI의 도움으로 독창적인 글이나 이야기를 쓸 수 있다.	3.30
	나는 생성형 AI를 사용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3.44
윤리적 활용능력	나는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 생각해봐야 할 중요한 윤리적 문제들을 알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다.	3.41
	나는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개인 정보보호 이슈에 대해 알고 있다.	3.44
	나는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책임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	3.62

생성형 AI 관련 교육 경험을 4점 척도(1=전혀 받아본 적 없다~4=자주 받았다)로 질문하였다. 그 결과 생성형 AI의 작동원리에 대한 이해교육, 생성형 AI를 잘 활용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 생성형 AI가 초래하는 개인 정보나 저작권침해 등에 관한 교육, 생성형 AI가 만들어 낸 정보의 오류나 편향성 등을 확인하는 교육 등 네 항목 모두 평균(2.5점)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해 청소년들이 생성형 AI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생성형 AI가 초래할 긍정적, 부정적 영향이나 생성형 AI가 만든 산출물에 대한 비판적 이해 등에 대한 현장 교육이 시급함을 암시해 주고 있다.



<그림 1> 생성형 AI 교육경험

청소년의 AI 리터러시 증진 방안

청소년의 AI 리터러시 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 AI가 생성하는 정보의 신뢰성과 편향성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살펴봤듯이, 청소년들이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산출물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능력은 비교적 낮았고 관련 교육을 받은 경우도 많지 않았다. 특히 디프 페이크와 같은 허위 합성물과 가짜 뉴스가 범람하는 AI 시대에는 비판적 사고 훈련을 통해, AI가 생성한 정보를 맹목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이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정보나 지식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평가하는 능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이다(김평원, 2024).

이와 관련, 미국의 AI for Education은 아래와 같이 AI를 항상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즉 끊임없이 결과물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노력은 AI를 책임 있게 사용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AI를 위한 교육

AI를 책임감있게 사용하는 방법 5가지

평가	의도한 목적과 필요를 충족시키는지 산출물을 평가하는 것
검증	신뢰할만한 출처를 사용하여 사실, 수치, 인용, 데이터를 검증하여 환각이나 편견이 없는지를 검증하는 것
편집	프롬프트를 편집하여 AI가 산출물을 개선할 수 있도록 후속 질문을 하는 것
수정	결과물이 고유한 요구사항이나 스타일, 어조를 반영하도록 수정하는 것. AI 산출물은 좋은 출발점이지만 최종 결과물은 되지 말아야 한다.
사용자	결국 사용자가 AI로 창조하는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항상 AI 도구를 활용한 부분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출처> <https://www.aiforeducation.io/ai-resources/how-to-use-ai-responsibly-every-time>

청소년들이 질문을 잘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생성형 AI의 경우 질문에 따라 답변 내용이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한 질문으로는 생성형 AI가 가진 방대한 정보를 활용하기 어렵다. 질문을 잘 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지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단순한 지식을 얻기 위해 챗 GPT 등 생성형 AI에 의존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해당 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생성형 AI를 활용해야 적절하고 깊이 있는 질문을 할 수 있게 되고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청소년들이 질문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는 질문하는 방식에 따라 답변 내용이 매우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체험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내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특정 분야에 대한 적절하고 훌륭한 질문을 제기한 학생들에게 상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강용철과 정형근(2022)은 자신이 보고 들은 정보가 타당한지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비판적 사고력이라며 끊임없이 질문하는 과정을 통해 이 능력이 증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특정한 정보를 접한 경우, 왜 이 정보를 만들었는지, 정보의 내용은 타당한지, 정보 소비자는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 정보 안에는 어떤 가치관이나 관점이 포함돼 있는지 등을 꾸준히 질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AI 시대에는 인공지능이 따라올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창의성을 증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챗 GPT의 장점은 빠른 시간 내에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편리하게 찾아주는 데 있다. 이 때문에 학업에 바쁜 청소년들이 시간을 아끼기 위해 챗 GPT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챗 GPT가 제시한 정보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면 자칫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 수 있다. 챗 GPT를 수업 시간에 활용하더라도 기본적인 정보를 찾는 데 이를 활용하고 챗 GPT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학생들이 사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탐구하는 능력은 인공지능이 따라올 수 없는 인간의 고유 영역이다. 챗 GPT를 수업 시간에 활용하더라도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의 창의적, 비판적 사고력 증진에 있기 때문에 챗 GPT를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AI 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일부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은 챗 GPT를 통해 기계를 괴롭힐 목적으로 이상하거나 엉뚱한 질문을 할 수도 있다. 인공지능도 엄연한 인격체이니만큼 청소년들이 인공지능과 대화할 때 기본적인 예의를 갖춰 소통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인공지능에게 욕을 하거나 화풀이를 하는 것은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존하는 시대에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부분이 AI를 활용한 과제물을 제출할 때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자신이 기여한 내용과 AI가 기여한 부분을 분명히 구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몇 년 전 국내의 한 국제 학교 학생들 중 일부가 챗 GPT를 활용하여 영문 에세이를 작성한 후 그대로 제출해 모두 0점 처리를 받은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따라서 AI를 활용하여 제출한 과제물에 대해 관련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는 교육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용철, 정형근 (2022). 미디어 리터러시, 세상을 읽는 힘. 서울: 샘터.
- 김주희 (2024). 생성형 인공지능규제와 미디어 리터러시. 국제정치연구, 27(1), 1-21.
- 김태원 (2023). ChatGPT는 혁신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 ChatGPT 활용사례 및 전망. The AI Report 2023-1. 대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김평원 (2024). 인공지능과 공존하는 사회에 필요한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리터러시, 28권, 58-63.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이창호, 모상현, 배상률, 이세영 (2024). 청소년의 생성형 AI 이용실태 및 리터러시 증진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숙영 (2022). AI 리터러시 프레임워크에 대한 연구.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25(5), 73-84.
- 황현정, 황용석 (2023). AI 리터러시 개념화와 하위차원별 세부역량 도출에 관한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40(2), 89-148.
- UNESCO (2022). K-12 AI curricula: A mapping of government-endorsed AI curricula. Paris: UNESCO.

02

국내동향

권익보호

- 생성형 AI 안전망 구축...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제시
-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크 패턴 사례집」 발간
- 정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범죄 총력 대응
「디프 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 포함 4개 부문 논의
- '집합건물' 이사하며 인터넷 서비스 이전 강제 못해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고시
- 방송통신위원회, 「신뢰받고 활력 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 사회 실현」 공표

방송 참여와 권익증진

- 정부, 국가 가용자원 총동원하여 대한민국 AI G3 도약 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공익채널 9개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1개 인정
- 정부, 4월부터 모든 국민 대상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제공
- 시청자미디어재단, 유아의 건강한 디지털 미디어 경험 지원
미디어 교육 및 콘텐츠 개발 확대
- 시청자미디어재단, 발달장애인 맞춤형 미디어 콘텐츠 30편 제작
-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 지원

권익보호

생성형 AI 안전망 구축...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제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3월 28일부터 시행되며,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사와 서비스 제공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4가지 기본원칙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6가지 실행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모범 사례도 제공된다.

가이드라인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과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딥페이크, 성범죄, 차별 등)를 해결하려는 목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년마다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이용자 인격권 보호	· 인격권 침해 요소 감지 및 통제 알고리즘 구축 · 내부 모니터링 및 이용자 신고 절차 마련
결정 과정을 알리려는 노력	·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고지 · 생성 과정 및 결정 방식에 대한 정보 제공
다양성 존중 노력	· 차별·편향적 정보 생성을 방지하는 필터링 적용 · 편향성 문제 신고 절차 마련
입력 데이터 수집·활용 과정에서의 관리	· 데이터 수집·학습 시 사전 동의 절차 마련 · 관련 책임자 지정 및 관리 체계 구축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과 참여	· 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임 범위 명확화 · 위험관리 시스템 및 점검 체계 마련
건전한 유통·배포를 위한 노력	· 부적절한 콘텐츠 생성·공유 방지 가이드 제공 · 윤리적 기준 준수 여부 모니터링 및 관리

 더 알아보기 : [방송통신위원회](#) > [알림 마당](#) > [보도자료\(Cli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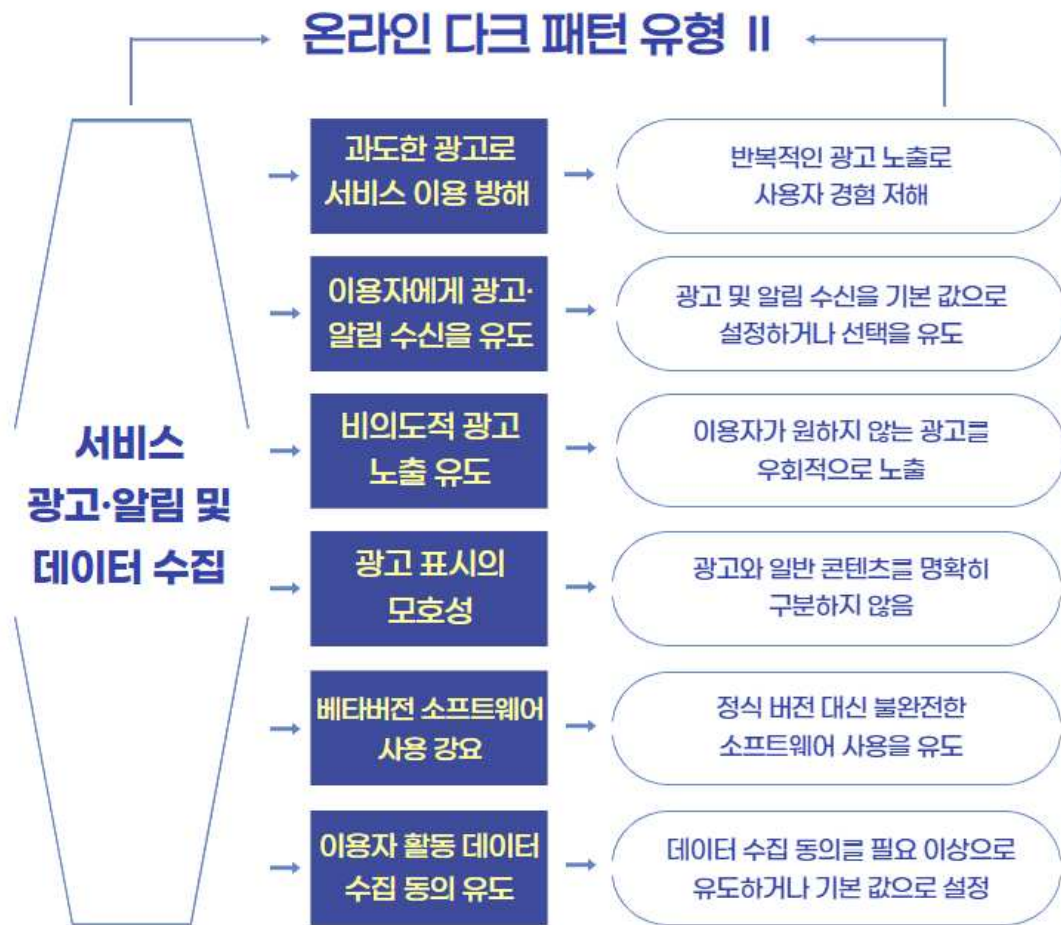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크 패턴 사례집」 발간

디지털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정보의 과잉과 복잡성이 증가해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용자의 선택을 무의식적으로 유도하는 '다크 패턴(Dark Patterns)' 설계로 인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보호를 위한 다크 패턴 사례집'을 발간했다. 다크 패턴이란 디지털 서비스 설계자가 이용자의 직관적 선택을 방해하거나 원치 않는 행동을 유도하는 디자인 기법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반복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구독 기반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이용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클릭을 유도하는 광고 및 알림(Notification) 설계 등이 있다.

이러한 다크 패턴 설계로 인해 이용자들은 불필요한 결제를 하거나 원하지 않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등 다양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사례집을 통해 주요 다크 패턴 사례를 소개하고, 각 사례별 이용자 인식 조사 결과와 정책 대응 사례 등을 분석해 이용자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 더 알아보기 : 방송통신위원회 > 정책/정보 센터 > 정책 연구과제 > 간행물([Click](#))

정부, 민생범죄 대응 강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 포함 4개 부문 논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월 6일 경찰청에서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마약·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딥페이크 성범죄 등에 대한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악성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 부처의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 중 보이스피싱 범죄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집중 소개하려 한다.

정부는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수사·통신·금융 등 다각적 대책을 추진한다.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 요약

자금세탁조직 집중수사 및 국제공조 강화

- 경찰은 보이스피싱콜센터·자금세탁조직·대포폰·대포통장 등에 대한 특별 단속 실시
- 전국 피싱사건 데이터 집적 → 범죄조직 연결고리 추적 및 국제공조 강화
- 중국·베트남과 협력해 해외 콜센터 합동단속 추진, 인터폴 공조 수사 확대

통신수단을 악용한 범죄 접근 차단

- 불법 스팸 차단: URL 포함 문자 차단, 과징금·범죄수익 몰수, 전송자격인증제 도입 추진
- 대포폰·번호 변경 차단: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 도입, 법인 다회선 가입 기준 강화
- 불법 온라인 광고 차단: '내구제 대출' 광고 삭제, 변작 중계기 유통 차단 추진
- 민·관 협력: 통신사와 협력해 AI 기반 피싱 대응 서비스 지원

금융권, 최후 방어선 역할 강화

- 안심 차단 서비스: 비대면 대출 차단 기능 도입(가입자 31만 명 돌파, 60대 이상 53.9%)
- 문진제도 실질화: 고객 인출·대출 시 의심 정황 고객 안내 및 신고 유도
- 본인확인 강화: 일정 규모 이상 금융사도 '금융회사'로 포함해 책임 강화
- 상호금융 기반 개선: 이상거래탐지 시스템 고도화,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책임제 도입

신고 편의 제공 및 취약층 맞춤형 홍보

- 신고대응센터 운영: '23.9월 개소 후 38만 건 상담, 4만 건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
- 신고 시스템 개선: 상담시간 오후 10시까지 확대, 전화번호 차단 속도 1일 → 10분 단축.
- 예·경보 문자 발송: 신고 내용 분석 후 신종 수법 발생 시 국민에게 즉시 알림.
- 맞춤형 홍보 강화: 중장년층 등 연령별 맞춤형 교육자료 제작 및 예방 활동 강화

또한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지난해 11월부터 △강력한 처벌 △플랫폼 책임성 강화 △신속한 피해자 보호 △예방 교육 확대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추진해왔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국제공조 확대

-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추진
- 선진 수사기법 도입(사법협조자 형벌 감면, 독립몰수제, 인터넷 모니터링 등)



플랫폼 규제 강화

- 불법영상물 24시간 내 삭제 의무화
- 성범죄물 게재자에 대한 플랫폼의 제재 조치 의무화
- '에브리타임' 앱 내 성희롱·혐오표현 자율규제 협의



피해자 보호 강화

- 워터마크 변형·삭제 시 불법행위 처벌 추진
- 모니터링 및 상담 역량 확대



예방 교육·홍보 지속

- 대학 전담인력 대상 교육·모의훈련 실시

정부는 남은 과제들을 지속 추진하고, 법·제도 정비를 통해 대책을 신속히 시행하며 국민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더 알아보기 : 방송통신위원회 > 알림마당 > 보도자료([Click](#))

'집합건물' 이사하며 인터넷 서비스 이전 강제 못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집합건물에서 특정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고시를 2월 24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1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후속 조치로, 오피스텔·아파트 등 집합건물 입주자가 기존 인터넷 서비스를 해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다.

고시는 오피스텔,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지식산업센터 등을 규제 대상으로 하며, 숙박업소·기숙사 등은 제외된다. 또한, 건물관리 주체는 소유자·관리인뿐만 아니라 위탁업체까지 포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입주민의 통신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더 알아보기 : 방송통신위원회 > 알림 마당 > 보도자료([Click](#))

방송통신위원회, '신뢰받고 활력 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 사회 실현' 공표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신뢰받고 활력 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 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3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1. 신뢰받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 'AI 이용자 보호 종합 계획' 수립 및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AI 이용자 보호법' 제정
- 불법·유해 정보 차단 강화(마약·도박·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및 허위 조작 정보 확산 방지 대책 마련
- 방송의 공익성 심사 강화 및 재난방송 관리 지원 확대

2. 활력 있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 제정 추진 및 미디어 통합법제 마련
- 차세대 방송 혁신 전략 수립 및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계획 추진
- 방송콘텐츠 해외 유통 지원(캐나다와 공동제작 협정 체결 등)

3. 국민중심 디지털·미디어 동행 사회 실현

- 단말기 유통법 폐지 후속 조치 추진 및 불공정 행위 방지책 마련
- 민생 밀집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 점검 및 다크 패턴·강제 광고 근절
- 장애인 대상 맞춤형 TV 지원 확대 및 미디어 교육 서비스 강화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 보호와 권익 증진을 최우선으로 삼고, 정책 공백을 최소화하며 실무적 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더 알아보기 : 방송통신위원회 > 알림마당 > 보도자료([Click](#))

방송 참여와 권익증진

정부, 국가 가용자원 총동원하여 대한민국 AI G3 도약 지원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2025년 2월 20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글로벌 AI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 관계자 및 네이버, 모레, 라이너 등 민간 기업과 전문가 40여 명이 참석했다.

최근 미국, EU, 프랑스 등 주요국이 AI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며 AI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우리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① AI 국가대표 정예팀 선발 및 LLM(대형 언어 모델) 개발 지원, ② AI 핵심인재 양성 및 해외 인재 유치, ③ AI 컴퓨팅 기반 확충, ④ 공공·민간 데이터 개방 확대, ⑤ AI 산업화 지원, ⑥ AI 스타트업 육성 등의 전략을 추진한다.

특히, '월드 베스트 LLM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AI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AI 프런티어 랩'을 확장해 국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2026년까지 국가 AI 컴퓨팅 센터 및 슈퍼컴 6호기에 총 1.8만 장의 고성능 GPU를 확보하고, AI 데이터센터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AI 기반의 산업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의료, 법률, 미디어·문화, 재난·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성형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중소기업 대상 AI 융자·보증 지원과 3조 원 규모의 AI 집중펀드를 조성해 스타트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AI 정책 추진 속도를 높여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더 알아보기 : 국가인공지능위원회 > 소통공간 > 보도자료([Click](#))

방송통신위원회, 공익채널 9개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1개 인정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제4차 회의에서 공익채널 9개와 장애인복지채널 1개를 선정했다.

공익채널(9개)

- 사회복지: 육아방송, 다문화TV, 소상공인방송
- 과학·문화: 아리랑TV, 사이언스TV, 토마토클래식
- 교육·지역: EBS 플러스1, EBS 플러스2, EBS English

장애인복지채널(1개): 복지TV

해당 채널들의 유효기간은 2025년 4월 1일~2027년 3월 31일(2년)이며, 유료방송사업자는 방송법에 따라 해당 채널을 의무 송출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채널 운영 실적을 분기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 알아보기 : [방송통신위원회](#) > [알림 마당](#) > [보도자료](#)(Click)

정부, 4월부터 모든 국민 대상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제공

고용노동부는 2025년 3월 4일 한국공인노무사회와 '노동 약자 중심의 고용노동행정 AI 혁신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인노무사 173명으로 구성된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개선 지원단'이 운영되며, AI 상담 서비스의 재학습과 품질 평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11월 정부 박람회에서도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공개했으며, 한 달간 2,528명이 11,682회 이용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다.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 5점 만점에 4.3점을 기록했으나, 상담 정확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협업을 추진했다.

앞으로 한 달간 AI 재학습 및 상담 품질 평가를 거쳐 4월부터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공인노무사회 누리집을 통해 AI 학습 데이터를 공개하고, 정책·법령 해석을 지속 반영하여 정확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번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는 영세사업장 근로자 및 청년 아르바이트생 등 노동 약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고, 공인노무사와 AI의 협업을 통한 상생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https://ai.moel.go.kr/>

더 알아보기 : 고용노동부 > 뉴스·소식 > 보도·설명 > 보도자료(Click)

The screenshot displays the 'AI Labor Law Consultation Service' interface. It features a chat window with a blue header and a white body. The chat history shows a user asking about overtime pay and the AI providing a detailed calculation based on the user's input. The interface includes a search bar, a chat input area, and a list of recent consultations. The chat text is as follows:

AI 노동법 지식 검색(시범운영)
중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연락...

연차수당 얼마 받아?
오후 4:47

AI 노동법 지식 검색(시범운영)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곧 답변드리겠습니다.
※ AI의 답변이 너무 길거나 복잡하다면 '요약해줘' 또는 '쉬운 말로 해줘'라고 입력해보세요.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 몇 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아래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계산을 진행하겠습니다.

- 근로 형태는 어떻게 되시나요? (시급제, 일급제, 주급제, 월급제 중 선택)
- 1주일 소정근로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 시급, 일급, 주급, 월급 중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몇 일인가요?

※ AI의 답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연락주세요.
오후 4:47

필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 일하고, 월급은 300만원이야. 연차 10일 남았어
오후 4:47

AI 노동법 지식 검색(시범운영)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곧 답변드리겠습니다.
※ AI의 답변이 너무 길거나 복잡하다면 '요약해줘' 또는 '쉬운 말로 해줘'라고 입력해보세요.

연차수당은 1년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연차수당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 통상 시급 × 미사용 연차일수

먼저, 협의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단, 귀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법적 기준을 초과하므로 최대 시간인 40시간으로 환산됩니다.)
* 통상 시급: 14,354.07원
* 미사용 연차일수: 10일

이로부터 1주 소정근로시간을 하루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한 뒤 연차수당을 계산하면,
 $8.00 \times 14,354.07 \times 10 = 1,148,326$

따라서 협의하신 연차수당은 1,148,326원입니다.

※ AI의 답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연락주세요.
오후 4:48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 지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2025년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지원 사업' 공개모집을 2월 24일부터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45개사)과 소상공인(193개사) 총 238개사를 선정해 방송광고 제작을 지원하며, 소상공인의 경우 비수도권 141개사를 우선 선정한다.

지원 내용:

- 중소기업: TV 광고 제작비 최대 4,500만 원(50%), 라디오 광고 제작비 최대 300만 원(70%)
- 소상공인: 광고 제작·송출비 최대 900만 원(90%)
- 전문가 컨설팅(기획·제작·활용) 지원 포함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누리집(www.kobaco.co.kr/smad)에서 확인 가능하다.

☆☆☆☆☆

방송통신위원회와 KOBACO가 지원합니다.

2025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기업 모집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해
방송광고 소재 제작비를 지원합니다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제작비) 지원사업
2025년 1차 모집 안내**



주요 내용: 매출 200% 이상 증가, 무료 마케팅 컨설팅 받는다

사업 목적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과 국가 경제 활성화

지원 내용 방송광고 소재 제작비, TV·라디오 광고 컨설팅

지원 금액 TV: 전체 제작비의 50% (최대 4,500만원)
라디오: 전체 제작비의 70% (최대 300만원)
(단,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음)

지원 자격 최근 1년 내 전국권 방송광고 집행 실적 없는 중소기업

지원 규모 중소기업 45사 선별 (TV 34사, 라디오 11사)

신청 기간 2025년 1월 24일 (금) ~ 2월 27일 (목) 18시

신청 발표 2025년 3월 중

신청 방법 KOBACO 중소기업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수
(www.kobaco.co.kr/smad)

문의처 KOBACO 중소기업지원팀
(02-731-7314, 7320, 7322)
smst@kobaco.co.kr

☆☆☆☆☆

방송통신위원회와 KOBACO가 지원합니다.

2025년 지역밀착형 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기업 모집

소상공인의 혁신 성장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방송광고 소재 제작·송출비를 지원합니다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사업
2025년 모집 안내**



주요 내용: 매출 100% 상승, 비용 절감

사업 목적 소상공인의 혁신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내용 TV/라디오 방송광고 제작비 및 지역 방송광고 송출비, TV·라디오 광고 컨설팅 비용

지원 금액 지원금액 한도: 최대 900만원 (TV·라디오 공통)
(단,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음)

지원 자격 최근 1년 내 지상파 방송광고 집행실적이 없는 전국 소상공인

지원 규모 소상공인 193사 선별 (비수도권 141사 우선 선별)

신청 기간 2025년 1월 24일 (금) ~ 2월 27일 (목) 18시
* 25년은 연 1회 (1차: 1~2월)만 모집

신청 발표 2025년 4월 중

신청 방법 KOBACO 중소기업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수
(www.kobaco.co.kr/smad)

문의처 KOBACO 중소기업지원팀
(02-731-7315, 7317, 7319)
smlo@kobaco.co.kr

더 알아보기 : 방송통신위원회 > 알림마당 > 보도자료(Click)

03

해외동향

권익 보호

- 핀란드 시청자 권익 보호 제도 현황

핀란드 시청자 권익 보호 제도 현황

미디어 복지국가(Media Welfare State) 핀란드

북유럽 국가들(Nordic countries)²⁾은 전통적으로 언론 자유(freedom of speech)를 중시해왔다. 보편적인 미디어 서비스(universal services), 편집권 자유(editorial freedom), 미디어 문화 정책(a cultural policy for the media), 공·사 소유자와 협의에 기반을 둔 합의적·지속적 정책 결정 등의 원칙을 갖고 있는 점에서 이들을 '미디어 복지 국가(Media Welfare State)'라고 불러왔다.

국경없는기자회(RSF)가 2002년부터 매년 180개국을 대상으로 국가와 지역의 언론 자유 수준을 측정하는 '2024 세계 언론자유 지수(World Press Freedom Index)³⁾'에 따르면, 상위권을 차지한 국가는 핀란드를 비롯한 대부분의 북유럽 국가들이다.⁴⁾

이번 편에서는 미디어 복지 국가들의 시청자 권익보호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제도와 정책의 미비점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보완하는 시스템을 갖춘 '핀란드'를 사례로 들어,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하고자 한다.

시청자 권익 보호 관련 핀란드 주요 기관

핀란드 교통통신부(MOTC, The 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는 국가평의회(Finnish Government, Valtioneuvosto) 산하 12개 부처 중 하나로, 핀란드의 교통 및 통신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이 부처는 양질의 교통·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주요 업무로는 방송 정책 개발, 통신 및 라디오·TV 방송 규제, 통신 시장 활성화, 주파수 정책 운영, TV 사업권 발행, 사생활 보호 및 데이터 보안 정책 개발 등이 있다.⁵⁾

핀란드의 유일한 공영방송인 Yle(Yleisradio, Finnish Broadcasting)는 대부분의 라디오 및 TV 채널을 소유하고 있으며, 최대 규모의 방송망을 운영하면서 핀란드 국민으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2023년 Yle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핀란드인의 86%가 Yle가 공영방송의 책무를 잘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⁶⁾ 이는 Yle가 핀란드에서 가장 신뢰받는 언론 매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북유럽은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핀란드의 5개국을 지칭함. 이에 더해 그린란드, 페로제도, 네덜란드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5개국을 일컬어 노르딕 국가(Nordic countries)로 불림

3) 언론자유 지수는 각 국가의 언론인 및 언론 매체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집계하는 정량 평가와 언론인 및 학자, 인권 옹호자 등 언론 자유 전문가 수백 명이 100개 이상의 질문에 응답한 정성 평가를 바탕으로 함

4) "한국 언론자유 지수 62위... 작년보다 15계단 추락", <한국기자협회>, 2024.05.03.,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5792>

5) 「국가별 ICT 시장동향 핀란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3.11.03, p. 6

6) Yle's Annual Report 2023, Yleisradio Oy, p. 8

 윌레이스라디오 (Yleisradio, Yle)	
소개	핀란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영방송 1950년 결성된 '유럽방송연합 (European Broadcasting Union, EBU)'의 23개 창립 방송사 중 하나
설립	1926년
채널	TV 채널 (3개), 라디오 채널 (6개)
소유	핀란드 정부가 99.98% 지분 보유 교통통신부 (MOTC) 산하 조직이지만, 운영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음
수익원	2013년부터 개인 및 기업이 납부하는 공영방송세 (Yle tax)로 운영 연소득 15,150유로 (EUR) 초과자는 연간 최대 163유로 납부 미성년자 및 연소득 15,150유로 미만자는 면제
감독기관	o 핀란드 교통통신청 (Finnish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Agency, Traficom) - Yle 운영 관련 감독, 상업적 운영 관련 차별화, 부당한 가격 책정 금지 광고 및 후원 금지 조항의 준수 여부 감독 ※ 핀란드 방송법 제12a조 (Section 12a of the Act on the Finnish Broadcasting Company) - 유럽 프로그램 포함 의무 준수 여부, 독립 제작자 할당량 준수,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보장 Yle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후원 금지 준수 여부 감독 ※ 전자통신서비스법 (Act on 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s) o 핀란드 의회 Yle 운영위원회 - 공영 서비스 의무 이행 여부 감독 (민주주의, 다양성, 소수자 인권보호 등) - 이사회 및 사장 임명 권한 보유 ※ 방송법 제7조 (Section 7 of Act on the Finnish Broadcasting Company)

Yle는 1926년 헬싱키에서 'Suomen Yleisradio'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며, 1958년 'Suomen Televisio'라는 채널 명으로 TV 정규 방송을 시작했다.⁷⁾ 국영 공기업 형태로 운영되며, 방송국 주식의 99.98%는 정부가 소유하고 있다. 재원은 핀란드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공영방송세(Yle tax)로 조달되며, 광고는 방영되지 않는다. 현재 Yle는 3개의 텔레비전 채널, 6개의 라디오 채널, 12개의 언어⁸⁾로 방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⁹⁾

7) 「방송통신위원회 핀란드 독일 공무국외출장 결과」, 방송통신위원회, 2019, p.23

8) 핀란드어, 스웨덴어, 북부 사미어, 이나리 사미어, 스콜트 사미어, 핀란드 수어 및 핀란드-스웨덴 수어, 로마니어, 카렐리아어, 영어,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9) <https://yle.fi/aihe/about-yle/finances>

방송 정책 및 규제, 심의 등은 시청자가 양질의 방송을 시청할 권리와 방송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구제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핀란드에서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교통통신청(Traficom, Finnish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Agency)**과 **대중매체위원회(CMM, The Council for Mass Media)**가 있다.

두 기관은 공통적으로 시청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지만, 역할과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다. 교통통신청(Traficom)은 방송·통신 서비스의 기술 및 법적 보호를 담당하는 반면, 대중매체위원회(CMM)는 언론의 윤리적 책임과 자율 규제를 통해 시청자 권익을 보호한다.

	교통통신청 (Traficom) Finnish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Agency	대중매체위원회 (CMM) The Council for Mass Media
성격	정부기관	비정부 독립기구
역할	미디어 및 통신 규제, 시청자 보호	언론 및 방송 윤리 감독
주점	방송·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및 접근성	언론 보도의 공정성과 책임성
보호대상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	뉴스 및 미디어 소비자
권한	법적, 행정적 제재 권한 보유	윤리적 권고 및 권장 수준의 결정 권한
대표기능	디지털 방송 품질 관리, 미디어 안전성 강화	언론 보도 감시, 시청자 민원처리

모두가 누리는 보편적 방송 서비스 권리 장애인 방송과 재난 방송

핀란드는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과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디지털 서비스 제공법(Act on the Provision of Digital Services, 306/2019)¹⁰⁾,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법(Act on Audiovisual Programmes, 710/2011)¹¹⁾, 핀란드 방송법(Act on the Finnish Broadcasting Company, 1380/1993)¹²⁾, 그리고 유럽연합(EU) 접근성 지침(European Accessibility Act, 2019)¹³⁾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장애인을 위한 자막, 수어(수화), 화면 낭독기 지원 등을 포함해 디지털 콘텐츠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방송사들은 장애인의 방송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접근성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핀란드의 공영방송사 Yle(Yleisradio)는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서비스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모든 주요 방송 프로그램에 자막을 제공하고, 뉴스 및 선거 프로그램에는 수어(수화) 통역 서비스를 지원하며, 시각 장애인을 위해 화면 해설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Yle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Yle Areena)은 접근성 표준을 준수하여 설계되었으며, 스크린 리더 및 자막 지원 기능을 갖추고 있다. 다양한 미디어 형식(오디오, 비디오, 팟캐스트 등)을 제공해 장애인들이 콘텐츠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특징이다.

핀란드는 장애인 방송 서비스의 강화뿐만 아니라, 공공 및 민간 디지털 서비스 전반에서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며, 2025년까지 EU 접근성 지침의 완전한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평등한 미디어 환경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또한, 핀란드는 재난 방송을 통해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를 위해 핀란드 방송법(Act on the Finnish Broadcasting Company, 1380/1993)¹⁴⁾, 텔레비전 및 라디오 운영법(Act on Television and Radio Operations, 744/1998)¹⁵⁾, 전자통신법(Act on 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s, 917/2014)¹⁶⁾등의 법률을 통해 방송사의 재난 방송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핀란드 공영방송사 Yle(Yleisradio)는 재난 방송의 핵심 기관으로, 국가 위기 발생 시 즉시 방송을 개시해 피해 예방, 대피 지침, 안전 수칙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한다. 또한, TV, 라디오,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며, 자막·수어(수화) 통역·오디오 설명 등을 제공해 장애인과 취약 계층도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10) <https://www.finlex.fi/fi/laki/smur/2019/20190306>

11) <https://www.finlex.fi/fi/laki/smur/2011/20110710>

12) Yle's Annual Report 2023, Yleisradio Oy, p. 25

13) <https://commission.europa.eu>

14) Yle's Annual Report 2023, Yleisradio Oy, p. 25

15) <https://www.finlex.fi/fi/laki/smur/1998/19980744>

16) <https://www.finlex.fi/fi/laki/smur/2014/20140917>

교통통신청(Traficom)은 국가의 교통·통신 서비스 운영을 담당하며, 재난 경고 시스템, 긴급 통신망 유지, 대체 교통 경로 안내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한다. 특히, 모바일 경고 시스템을 활용해 국민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국제 협력을 통해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핀란드는 법적 규제와 기술적 발전을 통해 재난 방송의 정확성, 신속성,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국민이 신속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청자 권익 보호의 또 다른 중심, 핀란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최근 많은 국가가 가짜 뉴스와 허위정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핀란드는 효과적인 대응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핀란드는 법적 규제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민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정보 분석 능력을 강화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스스로 정보를 검증하고 허위정보를 판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는 법적 대응보다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핀란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세계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1960년대부터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시작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1970년대부터 국가 기초 교육 과정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으며, 1972년에는 학교 교과 과정 원칙에 미디어 분석·비판적 수용·정보기술 이해 등을 포함했다.

이처럼 핀란드는 교육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다양한 교육기관·미디어 전문가·정부 기관이 협력해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단순한 규제보다 더 효과적인 시민 보호 시스템으로 작용하며,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참고 모델이 되고 있다.

○ 확장 and 융합을 통한 혁신적 접근

핀란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이를 단순한 정보 판별 능력을 넘어 ‘멀티 리터러시 (Multi Literacy)’ 개념으로 확장했다. 2016년 국가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미디어 리터러시와 ICT(정보통신기술) 역량을 핵심 교육 목표로 포함했다. 이를 통해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생애 주기별 미디어 교육을 실행하고 있다.¹⁷⁾

○ 다양한 기관과 협력을 통한 미디어 교육 생태계

핀란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중앙정부, 지자체, 연구기관, 교육기관,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진행되며, 각 기관의 전문성과 자원을 결합해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국립시청각연구소(KAVI)가 주관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주간(Media Literacy Week)’은 이러한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로, 매년 50여 개 기관이 공동으로 캠페인과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전국적으로 보급한다.¹⁸⁾

17) 진민정 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융합적 접근』, 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p. 76

18) 진민정 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융합적 접근』, 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p. 78-79

○ 융합형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 Yle의 '트롤 공장(Troll Factory)'

핀란드는 단순한 정보 교육을 넘어 게임, 데이터 과학, 탐사보도 등 다양한 형식을 결합한 융합형 미디어 교육을 운영한다. 핀란드 공영방송사 Yle의 '트롤 공장(Troll Factory)'은 허위정보에 대한 청소년 교육을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게임 형식을 활용해 참가자들이 직접 가짜 뉴스 제작 과정을 체험하고 허위정보를 판별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다.

허위정보 영향력 체험 게임 '트롤 공장 (Troll Factory)'



배경

러시아의 정보 공격과 극단주의 선전·선동, 반이민 정서를 포함한 허위 정보 확산을 경계하기 위해 제작됨

내용

- 사용자가 직접 허위 정보 유포자의 역할을 체험하는 시뮬레이션 게임
- 익명의 보스에게 지시를 받아 일주일간 불특정 다수에게 선동 메시지를 퍼뜨리는 방식
-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의 원리, 허위 정보에 대한 경각심, 정보 유포의 문제점
디지털 정보 제작자의 윤리적 책임, 혐오·차별적 메시지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교육함

유럽 디지털 미디어 어워드 (2020) 디지털 뉴스 미디어 혁신 부문 선정



Step 1

선동 방법 선택



Step 2

소셜미디어 광고 집행



Step 3

메시지 및 이미지 조합의
영향력 체험



Step 4

정보 전파 범위의 변화와
관련된 알고리즘의 시각화

○ 모든 시민을 위한 평생 미디어 교육

핀란드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확장하여 성인과 노년층을 위한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학부모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와 미디어: 디지털 교육을 위한 7가지 팁' 자료가 제작되어 가정에서도 아이들의 미디어 사용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9년 핀란드 교육문화부가 발표한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 안에 따르면, 개정된 정책의 핵심은 미디어 리터러시를 모든 시민에게 동등하게 중요한 시민적 역량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처럼 핀란드는 미디어 리터러시 자체를 시민의 역량으로 이해하며, 모든 사람들이 포함하여 교육한다는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여기고 있다.¹⁹⁾

핀란드 정부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모든 시민의 필수 역량으로 인식하고, 이를 통해 허위정보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구축하고자 한다.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시청자 권익 보호의 핵심 요소이며, 핀란드의 접근법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19) 진민정 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융합적 접근』, 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p. 77-79

본 보고서는 시청자미디어재단 시청자권익정보센터에서 발간하는
「시청자 권익보호 동향 리포트」입니다.
시청자 권익정보 플랫폼 ‘미디어인(Medi人)’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ediin.or.kr>